



인천 경제산업 ISSUE&TREND

제24-4호 (2024.02.23)

- 이슈
(국제) 탄소중립을 위한 주요국 정책과
녹색무역장벽의 대두
- 주요 산업 현황
(제조) 바이오산업 시장 동향
- 국내 정책동향





인천 경제산업 ISSUE&TREND

제24-4호 (2024.02.23)

Cotents

I. 이 슈

(국제) 탄소중립을 위한 주요국 정책과 녹색무역장벽의 대두 1

II. 주요 산업 현황

(제조) 바이오산업 시장 동향 7

(부록) 주요 산업 수출입지표 10

III. 국내 정책동향

(보건) 복지부,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24~'28)' 발표 11

(교육) 아이 돌봄 부담 덜어줄 '늘봄학교' 2026년까지 모든 학교로 확대 시행 11

(복지) 여가부, 폭력 피해자 보호 강화를 위한 '통합상담소' 운영 12

(교육) 교육부,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대학의 창의적 혁신 지원 12

(관광) 여행가는 달 3월, 교통·숙박·여행상품 대폭 할인 13

(고용) 문체부, 22일부터 상반기 청년인턴 146명 모집 13

(금융) 첨단산업과 중소·중견기업 지원을 위한 '맞춤형 기업금융 지원방안' 발표 14

(산업) 정부, 인공지능 시대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AI 가이드라인 마련 추진 · 14

연구진

최태림	인천연구원 경제환경연구부 연구위원
민규량	인천연구원 경제환경연구부 연구위원
상민경	인천연구원 경제동향분석센터 추진단 연구원
류동훈	인천연구원 경제동향분석센터 추진단 연구원

국제

탄소중립을 위한 주요국 정책과 녹색무역장벽의 대두



#기후위기대응 #탄소중립 #환경정책 #통상환경변화 #무역장벽

- 전 세계적으로 기후위기 대응과 관련한 공감대가 확산됨에 따라 해외 주요 국가에서는 녹색산업을 활성화하고 탄소중립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는 등 탄소중립을 위한 노력을 확대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탄소배출'이 새로운 글로벌 통상 이슈로 제기
 - 2023년 12월,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은 제28차 당사국총회(COP)를 개최하여 파리협정의 이행 정도를 평가¹⁾하고, 참여국 간 합의를 통해 유엔기후변화협약 문서에 '에너지 부문에서 화석연료로부터의 전환(Transitioning away from fossil fuels in energy systems)' 문구를 포함
 - 동 회의에서 지구 평균온도 1.5°C 상승 억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2050년 탄소중립 달성의 중요성을 재확인하고, 기후변화협약 문서에 처음으로 '화석연료로부터의 전환'이라는 문구가 포함됨에 따라 전 세계적으로 저탄소·탈탄소로의 전환이 가속화될 전망
 - 파리협정의 이행 정도를 평가한 첫 전 지구적 이행점검(Global Stocktake, GST) 결과 현재 수준의 노력으로는 파리협정의 목표인 1.5°C를 달성하기 어려운 것으로 예상되어, 2025년 제출할 국가별 "2035 국가 감축목표(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 NDC)"를 더욱 강화할 것을 요구
 - 미국, 영국, EU, 일본, 중국 등 해외 주요국에서는 2050년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하고, 자국의 산업 경쟁력 저하를 방지하기 위해 다양한 기후·환경·산업 관련 정책을 발표
 - 주요국은 EU의 '유럽그린딜²⁾', 영국의 '넷제로 전략³⁾', 중국의 '중화인민공화국 국민경제와 사회발전 제14차 5개년 계획과 2035년 장기목표 강요⁴⁾(제14차 5개년 계획), 일본의 '녹색 전환(GX) 실현을 위한 기본방침⁵⁾(GX 기본방침)' 등의 정책을 통해 탄소중립 달성 목표를 설정하고 자국 산업의 전환·육성을 추진
 - 우리나라 역시 2023년 4월 탄소중립 및 녹색성장 관련 법적·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고 부문별 온실가스 감축 정책을 보완한 내용을 담은 '제2차 국가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을 확정
 - 한편 최근 미국과 EU에서 '인플레이션 감축법(Inflation Reduction Act, IRA)', '탄소국경조정제도(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 CBAM)' 등 탄소 관련 통상 규제 조치를 포함한 기후·환경·산업 정책을 시행하면서 글로벌 통상에서 '녹색 무역장벽⁶⁾'이 새로운 이슈로 대두

1) UNFCCC의 제28차 당사국총회는 2023년 11월 30일부터 2023년 12월 13일까지 2주간 아랍에미리트 두바이에서 개최됨.

2) European Green Deal.

3) Net Zero Strategy : Build Back Greener.

4) 中华人民共和国国民经济和社会发展第十四个五年规划和2035年远景目标纲要.

5) GX実現に向けた基本方針: 今後10年を見据えたロードマップ.

6)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친환경적인 기업에는 이득을, 그렇지 않은 기업에는 부담을 지우는 구조의 국가별 탄소중립 기후·환경 정책이 자국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외국기업을 견제하는 일종의 무역장벽으로 기능하는 것을 의미.

- EU는 2019년 새로운 집행위원회가 출범하며 ‘유럽그린딜(European Green Deal)⁷⁾’의 목표인 2050년 온실가스 순배출 제로를 달성하기 위해 ‘Fit for 55’, ‘그린딜 산업계획(Green Deal Industrial Plan)’ 등을 통해 기후·환경 관련 정책을 강화하였으며, 2023년부터는 역외 제품에 일종의 탄소관세를 부과하는 ‘탄소국경조정제도(CBAM)⁸⁾’의 시범사업을 추진
 - 유럽그린딜의 2050년 탄소중립을 위한 중간 목표로 2021년 7월 발표된 ‘Fit for 55’는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1990년 대비 55% 감축하기 위한 입법안 패키지로, △탄소가격제 △2030년 목표 달성을 위한 제반 조치 △규제강화 △지원대책 등 4개 분야로 구성
 - 이에 따라 2023년 5월 역외 생산 제품에 대해 EU와 동일한 탄소배출 규제를 적용하고 그 차이를 수입 가격에 반영하는 ‘탄소국경조정제도’을 발표하여, EU 역내 기업이 역외 국가로부터 CBAM 대상 품목 수입 시 품목에 내재된 탄소 배출량 1톤당 인증서 1개를 구매하도록 할 계획
 - 2023년 2월 발표한 ‘그린딜 산업계획’은 △규제환경 개선 △자금조달 활성화 △숙련인력 역량 강화 △교역 활성화 등 4가지 수단을 통해 유럽의 친환경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산업전략
 - 동 계획에 따라 EU에서는 기업의 탄소중립 전환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탄소중립산업법(Net-Zero Industry Act)」, 「핵심원자재법(Critical Raw Material Act)」, 「대체연료인프라규정(Alternative Fuels Infrastructure Regulation)」 등 친환경 산업 관련 규제 완화 및 관련 투자를 촉진하고, 청정기술에 대한 투자를 지원하기 위한 유럽국부펀드를 신설
 - 또한 친환경 전환에 필요한 인력양성을 위한 아카데미 운영 및 자금 지원을 실시하고, 불공정무역 방지를 위한 「역외보조금규정」을 운영
 - 이외에도 EU에서는 ‘22년 발표한 ‘에코디자인 규제안(ESPR)⁹⁾’에 명시된 ‘디지털 제품여권(Digital Product Passport, DPP)¹⁰⁾’을 ‘26년부터 △전자제품 및 ICT △배터리 및 자동차 △섬유 △플라스틱 △건축 및 건설 △식품·물·영양분 △포장 등에 우선 적용한 후 확대 시행할 것으로 전망

탄소가격 결정	감축목표 강화	환경규제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배출권거래제 강화(항공) • 배출권거래제 확대(해운, 육상, 운송, 건물) • 에너지세제 개정 • 탄소국경조정제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배출 감축 노력 분담규정 • 토지이용, 토지이용 변화도 임업 규정 • 재생에너지 지침 개정 • 에너지효율 지침 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승용·승합차 탄소배출 규제 강화 • 대체연료 인프라 신규 배치 • 지속가능한 항공연료 기준 마련 • 청정한 선박연료 기준 마련
재원: 사회기후기금		

* 자료 : 국회예산정책처(2023.05)

[그림 1] EU ‘Fit for 55’의 12개 입법안

- 7) 8개 중점분야(기후/환경 및 해양/에너지/운송/농업/금융 및 지역발전/산업/연구개발 및 혁신)의 친환경 성장 전략을 담은 정책.
- 8) 탄소국경조정제도는 탄소배출량 감축 규제가 강한 국가(EU)에서 상대적으로 규제가 약한 국가로 탄소배출이 이전되는 탄소유출(Carbon Leakage) 문제를 막기 위해 EU가 도입한 무역관세의 일종으로 ‘23년 10월부터 ‘25년까지 시범 운영한 후 ‘26년부터 CBAM 인증서의 제출을 의무화할 계획. 시범 운영 기간에는 탄소배출량에 대한 보고 의무만 존재하는데, 특히 시멘트, 비료, 알루미늄, 전기, 수소, 철강 등 6개 품목 및 대상 품목군 내의 핵심 중간재와 특정 다운스트림 제품은 의무보고대상임.
- 9) 지속가능한 제품을 위한 에코디자인 규정(Ecodesign for Sustainable Products Regulation, ESPR) 제3장.
- 10) EU에 유통되는 모든 제품의 전 생애주기(생산-유통-판매-사용-재활용 등)에 걸친 사용법, 원자재, 공급-유통, 내구성, 재활용-수리 가능성, 환경발자국 등의 정보를 디지털로 수집·저장하고 이해관계자들이 공유하는 제도로, 일부 제품 및 살아있는 동·식물 등은 제외.

2 · 인천연구원 경제동향분석센터 추진단

- 미국은 '22년 8월 에너지 안보 및 기후변화 대응, 친환경 차량 시설투자 및 생산 인센티브 등의 내용을 담은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을 발표하였으며, 탄소 배출량이 높은 수입품 및 자국 생산품에 탄소비용을 부과하는 내용의 '청정경쟁법(Clean Competition Act, CCA)'를 단계적으로 도입할 예정
- IRA는 2030년까지 온실가스 40% 감축을 목표로 친환경 에너지를 이용한 생산·투자 및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정책에 3,690억 달러를 투입하는 것을 골자로, 전기차 보급 확대를 위한 인센티브를 포함
 - 전기차·배터리 및 관련 소재·부품의 제조 시설을 미국 내에 설치하거나 확장할 경우 해당 투자액에 대한 세액공제를 지급하고, 미국 내에서 생산·판매되는 배터리·태양광·풍력 등 첨단 부품과 핵심광물에 대한 생산비용 세액공제 시행
 - 북미 내에서 최종 조립된 일반 친환경차가 배터리 부품 또는 광물 요건을 충족하거나, 상업용 친환경차를 구매할 경우 세액공제를 제공하고, 대형 친환경차량 구매 시 보조금을 지급
- 또한 미국은 2024~2025년 중 자국 내 해당 산업의 평균보다 탄소 배출량이 높은 수입품 및 자국 생산품에 탄소비용을 부과하여, 탄소배출 집약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미국 기업에 경쟁우위를 제공하는 일종의 탄소국경조정제도인 '청정경쟁법(CCA)¹¹⁾'을 단계적으로 실시할 계획
 - CCA는 지난해부터 EU에서 시범 시행 중인 탄소국경조정제도(CBAM)에 비해 도입 초기부터 적용 대상 품목 및 탄소 배출량 산정 범위가 넓어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한 상황

[표 2] 청정경쟁법(CCA) 발의안 주요 내용

구분	주요 내용
적용 분야	• 화석연료, 석유정제, 석유화학, 비료, 수소, 아프디산, 시멘트, 철강, 알루미늄, 유리, 펄프 및 종이, 에탄올 등 에너지 집약적 산업
탄소 가격	• 톤당 55달러 - 매년 인플레이션율(실질 경제성장률)보다 5% 인상
자국 산업	• 미국 내 생산지는 업계 평균 배출량 기준보다 많은 배출량에 대해 초과 비용 지불 • 기업 제출자료를 기반으로 재무부가 각 해당 산업별 평균 탄소 배출집약도 기준을 제시 • 배출집약도 기준은 2025-2028년까지 매해 2.5%씩, 그 이후에는 5% 감소하도록 설계
수입 상품	• 수입기업이 원산지 국가의 배출집약도와 미국 산업 평균 배출집약도 차이에 해당하는 톤당 탄소 배출량에 대한 비용을 지불(자국 산업 계산 방식과 유사) - 신뢰할만한 데이터가 없는 경우 : 원산지 국가 경제의 배출집약도 수준과 미국 경제 배출집약도 수준 비율 - 신뢰할만한 데이터가 있는 경우 : 원산지 국가 산업 평균 배출집약도 수준과 미국 해당 산업 배출집약도 수준 비율
수출 리베이트	• 탄소국경조정이 적용되는 미국 내 원자재 및 완제품 생산지는 수출 리베이트 적용(WTO 규칙 수준 전제) • 2024(2025)년부터 적용 대상 제품에 단계적으로 도입
시행 시기	• 2026(2027)년부터 적용 범위를 확대하여 최소 500파운드(226kg) 이상의 에너지 집약적 1차 제품을 포함하는 모든 수입 완제품까지 확대 • 2028년부터는 최소 원자재량 기준을 100파운드 이하로 조정
수익 활용	• 수익의 75%는 영향을 받는 산업의 탈탄소화에 대한 투자 자금 지원 • 수익의 25%는 최빈국의 탈탄소화에 대한 투자 자금 조달
비고	• 최빈개도국은 면제 대상

* 자료 : 국회미래연구원(2023), 대신증권(2023), NISKANEN CENTER(2022, 2023) 등 참고 및 재구성

11) 2022년 월 발의안 및 2023년 12월 발의안의 내용을 포함하여 작성(2024.02.20 기준).

- 영국은 2020년 11월 ‘녹색 산업혁명을 위한 10대 중점계획((10대 계획)¹²⁾’을 통해 EU 탈퇴 이후의 독자적 탄소중립 정책 방향을 정하였으며, 2021년 10월에는 2050년 탄소중립 목표를 이루기 위한 정책 및 투자 계획을 담은 ‘2050 탄소중립 전략보고서(Net Zero Strategy : Build Back Greener, 넷제로 전략)’을 발표
 - 영국은 △2019년 6월 ‘기후변화법(Climature Change Act of 2008)’ 수정 △2030년 NDC 1990년 대비 최소 68% 감축 목표 설정 등 탄소중립과 관련해 주요국 중 가장 적극적인 행보
 - 10대 계획에서는 탄소중립과 산업부흥을 융합 추진하기 위해 2030년까지 ①해상풍력 ②저탄소수소 개발 ③원자력 연구개발 ④수송 부문 탈탄소화 ⑤대중교통 친환경화 ⑥항공 및 선박 저탄소화 ⑦건물 에너지효율 향상 ⑧탄소 포집·저장·활용(CCUS)¹³⁾ ⑨자연보호 ⑩녹색금융 등에 민관 통합 120억 파운드를 투자할 계획을 수립
 - 넷제로 전략에서 밝힌 10대 계획 이행상황에 따르면, 영국정부의 계획대로 10대 분야에서 전반적으로 탄소중립과 일자리창출 등이 활성화되어 녹색산업혁명의 이행성과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확인
 - 넷제로 전략은 10대 계획의 세부 과제를 기초로 작성된 탄소중립을 위한 투자 계획 및 중간 목표를 담은 보고서로, 동 보고서에서는 정부 계획 측면이 아닌 기업 및 소비자들이 청정에너지와 녹색기술 적용 제품 등으로 전환하는 것을 지원하는 것에 초점
 - 동 전략은 기업과 소비자 측면의 탄소중립 활성화를 위해 △발전 △연료공급·수소 △산업 △열·건물 △수송 △천연자원·폐기물·불소가스 △온실가스 흡수(removal) 등 7개 부문을 다루고 있으며, 기업과 소비자의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보조금 지급 및 투자 계획을 포함

- 중국에서는 그간 5개년 계획 및 중장기 발전계획 등 주요 정책에서 ‘지속가능한 성장’, ‘생태문명’, ‘저탄소 경제 추진’ 등 탄소중립과 관련한 개념을 포함해 왔으며, 2022년 3월 양회¹⁴⁾에서는 ‘생태환경 개선 및 저탄소·녹색 발전의 지속 추진’을 표명
 - 중국은 2021년 3월 2021년부터 2025년까지의 발전계획을 담은 ‘제14차 5개년 계획’을 발표하며 2025년까지 국내총생산(GDP) 대비 에너지 소비를 2020년 대비 13.5% 감축하고, 단위 GDP 대비 이산화탄소 배출 역시 2020년 대비 18% 감축할 것을 목표로 설정
 - 동 계획의 목표 실현을 위해 국무원은 ‘21년 9월 ‘에너지 소비 강도와 에너지 총소비량에 대한 이중제한제도에 관한 통지¹⁵⁾’를 발표하여, 에너지 소비 강도 및 총소비량에 대해 2025~2035년 기간 내 3단계의 에너지 자원 최적 배치 달성 목표를 제시
 - 2021년 10월에는 중국 경제 전반의 저탄소 전환을 위한 R&D 및 인프라 고도화, 대국민 캠페인 등의 내용을 담은 ‘2030년 이전 탄소배출 정점 도달을 위한 10대 방안¹⁶⁾’을 발표
 - 2022년 3월 양회의 중국정부 업무보고에서는 △친환경·저탄소·순환 발전 경제시스템 구축 △오염물 배출

12) The Ten Point Plan for a Green Industrial Revolution.

13) Carbon Capture, Utilization and Storage.

14)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 및 전국인민대표회의를 통칭하는 말로, 일반적으로 전자는 3월 4~10일, 후자는 3월 5~11일에 개최.

15) 关于印发《完善能源消费强度和总量双控制度方案》的通知.

16) 2030年前碳达峰行动方案.

감소 및 생태환경 개선 △자원 이용률 제고 등을 통해 녹색 전환 및 탄소중립을 추진하고, 대기오염을 방지하며 생태환경 보호를 위한 국토 녹화사업을 전개할 계획을 발표

- 녹색기술 혁신체계 마련 및 녹색산업 시범기지를 건설하는 등 경제의 녹색 전환을 위한 시스템·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2021년 하반기에 발표한 ‘탄소중립 마스터 플랜¹⁷⁾’ 및 분야별 이행방안(1+N) 정책 체계를 신재생 에너지 및 탄소저감기술 개발을 중심으로 개선

[표 3] 중국 ‘2030년 이전 탄소배출 정점 도달을 위한 10대 방안’

구분	주요 내용
에너지 녹색·저탄소 전환	• 석탄 발전 대체, 신재생에너지원 보급 확대, 원전 보급, 전력 시스템 고도화 등
에너지 절약 및 탄소저감 증대	• 에너지 저감 및 탄소배출 저감사업 추진, 에너지 설비 시스템 및 인프라 고도화
제조업 분야의 탄소피크	• 제조업의 녹색화, 철강·금속·건축자재·석유화학산업의 탄소피크 방안 추진
도농 탄소피크	• 도농 저탄소 녹색 전환, 건축 에너지 효율 제고, 농촌지역에서의 저탄소 에너지 사용
교통운수의 녹색 저탄소화	• 운송 수단의 저탄소(전기·수소·천연가스 등) 전환, 녹색 교통 인프라 구축
탄소저감을 위한 순환경제	• 산업단지의 순환경제 도입, 폐기물 종합 재활용, 자원 재활용 체계 마련
녹색 저탄소 과학기술 혁신	• 기초응용연구, 인력양성, 기술 개발 등 혁신 체계 확립
탄소포집능력 제고	• 생태 자연 모니터링, 탄소환원사업 추진
녹색 저탄소 범국민 캠페인	• 교육, 녹색 저탄소 생활방식 도입, 기업의 사회적 책임 확대
지역별 단계별 탄소피크	• 지역 맞춤형 단계별 목표 제시를 통한 저탄소 녹색 발전, 중앙-지방정부 연계 협력, 시범사업 추진

* 자료 : 산업연구원(2022)

- 일본은 2020년 10월 ‘2050년 탄소중립’을 선언한데 이어 12월에는 ‘2050년 탄소중립에 수반하는 녹색성장전략¹⁸⁾’을 발표하였으며, 2023년 2월에는 ‘녹색전환(Green Transformation, GX) 실현을 위한 기본방침: 향후 10년을 바라본 로드맵(GX 기본방침)’을 확정·공표하며 녹색전환 추진에 박차
 - 녹색성장전략은 2050년 탄소중립 실현 로드맵을 △재생에너지 주력 전원화 △에너지 효율화 및 수소전략(~’30) △탈탄소 전력에 의한 전기화(~’50) △탈탄소연료로의 대체 및 탄소 포집·활용·저장(CCUS), 카본 리사이클 등 이산화탄소 회수·재이용 기술 활용 등 에너지 분야를 중심으로 제시
 - 또한 일본 정부는 △에너지 안정공급 △탈탄소 △경제성장을 목적으로 하는 녹색산업 전환 정책안 GX 기본방침을 발표하며, ①에너지 안정공급 확보를 통한 GX 대응 ②‘성장 지향형 카본 프라이싱(CP) 구상’의 실현·실행 등의 추진 방침을 수립
 - 동 방침에 따라 일본정부는 △철저한 에너지 절약 및 제조업 구조 전환 △재생에너지 주력 전원화 및 전력계통 정비 △폐원자로 교체 등 원자력 이용 △수소·암모니아 등 탈탄소 연료 및 카본 리사이클 연료 도입 촉진 등 에너지 공급 구조를 재구축하면서 탈탄소를 추진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
 - 또한 ‘GX 경제이행채’ 발행을 통해 향후 10년간 CP 실행을 위한 선행 투자를 지원하고 탄소배출에 대한 가격 책정으로 GX 관련 사업의 부가가치를 향상시킬 계획이며, 국제전력·탈탄소 선행지역 선정·중소기업 보조금 등을 통해 일본 사회 및 아시아 전체의 GX를 지원할 예정

17) 「关于完整准确全面贯彻新发展理念做好碳达峰碳中和工作的意见」.

18) 内閣官房(2021), 『2050年カーボンニュートラルに伴うグリーン成長戦略』.

- 최근 전 세계 주요국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국가별 탄소중립 및 녹색산업 활성화 정책을 수립하고 있는데, 이러한 친환경 정책이 통상 환경에서는 일종의 녹색무역장벽으로 작용할 전망
 - 주요국의 탄소중립정책 및 녹색산업 성장 지원정책은 △역외 제품·서비스에 대한 탄소비용 부과 △친환경인증 의무화 △자국기업 보조금 지급 등 실질적으로 외국기업의 자국시장 접근을 제한하는 조치를 포함하고 있어 우리나라와 같이 수출 중심의 경제체제를 가진 국가에 부정적 영향을 줄 가능성 존재
 - 이에 우리나라 정부 역시 탄소중립을 위한 국가전략 및 지원 정책을 마련하고, 기후 클럽¹⁹⁾에 참여하는 등 국내 탄소중립 지원과 탄소중립 관련 해외 협력 강화를 위해 노력
 - 정부는 국내 산업의 친환경 전환 및 녹색산업의 주력 산업화를 위해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술혁신 전략'(22.10)', '탄소중립·녹색성장 국가전략 및 제1차 국가 기본계획'(23.04)', '무탄소 에너지 이니셔티브 추진계획'(23.10)' 등 다양한 정책을 연달아 발표

- 인천시 산업구조는 철강, 전기·전자, 석유·화학제품 등 탄소 다배출 산업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어 이와 같은 통상환경 변화에 따른 부정적 영향에 노출되어 있으므로, 지역 내 기업들의 친환경 전환 및 수출 경쟁력 확보를 위한 지원책 마련과 함께 신뢰성 있는 탄소배출량 측정·관리를 위한 기반 마련이 필요
 - EU의 디지털 제품여권(DPP)과 같이 향후 주요국의 신규 정책에서 제품의 생애전주기 탄소발자국 정보를 요구할 수 있으므로, 각 산업별 공급망 전체의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전반적인 관리가 필요
 - 특히 제조업의 경우 주요 수출국의 정책에 영향을 많이 받는 만큼 중앙정부에서 시행하는 지역의 친환경 에너지 전환 및 기업 녹색전환 관련 국가사업에 참여하고, 인천시 주도로 연관 기업간 탄소중립을 위한 전략 파트너십을 맺는 등 지역산업 내 가치사슬에 따른 공동대응방안 마련이 요구
 - 한편 현행 체계로는 △탄소배출 및 친환경전환사업 관련 통합 플랫폼 부재 △기업별 제품별 탄소배출량 측정 체계 미비 △탄소중립전환 관련 정책의 일관성 부족 등의 문제로 인해 기업이 자사의 탄소배출량 적정성을 판단하거나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지원사업에 참여하기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체계화된 정보 플랫폼 구축이 필요
 - 배출량 측정 관련 제도 수립 및 측정 결과 공개를 통해 기업·제품의 탄소배출 관련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는 통합 플랫폼을 구축하고, 기업이 보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개별 탄소중립 계획을 수립·실천할 수 있도록 하는 시의 지원방안 마련이 중요
 - 마지막으로 탄소중립을 위한 해외 주요국들의 정책이 단계적으로 확대·시행되고 있으며 주요 규제와 관련한 세부사항이 차후에 결정될 예정이므로, 이에 대한 지속인 모니터링과 함께 변화하는 제도에 대한 기업·소비자 교육 강화 필요

19) 기후 클럽은 파리협정의 효과적인 이행과 글로벌 탄소중립 달성을 가속화하기 위한 협의체로 우리나라를 포함해 독일, 미국, 영국, 이탈리아, 일본, 캐나다, 프랑스 등 G7 국가와 칠레, 인도네시아, 카자흐스탄, 케냐, 모로코, EU 등 총 36개국이 참여하고 있는 단체로 2023년 12월 공식 출범.

제조

바이오산업 시장 동향



#화장품 #기타 화장품 #의약품

- 2024년 1월 기준 국내 화장품 부문 수출은 전년동월비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며, 바이오헬스 부문 역시 '23년 11월부터 회복세²⁰⁾
 - 화장품 부문은 전년동기대비 71.0% 증가한 799백만 달러의 수출액을 기록하며, 연속 8개월째 수출액 증가세가 지속
 - 지난해 상반기 화장품 부문 수출이 부진했던 점과 최근 화장품 수출 국가가 다변화되고 있는 점이 큰 폭의 수출액 증가세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추정
 - 바이오헬스 부문은 대중국 수출 회복과 동시에 △바이오시밀러 신규의약품 출시 및 글로벌 수요 확대 △국내 위탁생산(CMO) 기업의 대규모 계약 수주 증가 △ 생산설비 가동률 상승 등으로 인해 '23년 11월부터 반등
 - 바이오헬스 부문의 1월 수출액은 전년동기대비 3.6%, 전기대비 14.6% 증가한 1,154백만 달러의 수출액을 기록하며, 3개월째 전년동기비 증가세
 - 의약품 수출 역시 전년동기대비 6.5% 증가한 718백만 달러를 기록하며 바이오헬스와 더불어 3개월 연속 증가

[표 1] 국내 바이오산업 수출 추이

(단위 : 백만\$, %)

구분	'23.06	'23.07	'23.08	'23.09	'23.10	'23.11	'23.12	'24.01
화장품 (증감률)	737 (12.3)	642 (4.6)	698 (12.0)	825 (11.6)	763 (10.7)	771 (20.8)	697 (17.3)	799 (71.1)
바이오헬스 (증감률)	1,296 (-6.2)	962 (-17.6)	921 (-25.2)	1,123 (-15.1)	1,043 (-1.6)	1,214 (18.8)	1,299 (4.3)	1,154 (3.6)
의약품 (증감률)	786 (-10.8)	561 (-22.7)	497 (-39.8)	672 (-20.9)	627 (-1.7)	708 (26.4)	783 (8.6)	718 (6.4)

* 자료 : 산업통상자원부 '월별 수출입동향(2023.11.01)' 참고 및 재구성

* 주1 : 최근 2개월 수치는 잠정치로 추후 변동될 수 있으며, 증감률은 전년동월대비로 표기

2 : 각 자료는 소수점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

20) 산업통상자원부, '월별 수출입동향(2024.02.01)'

- **(전국)** 국내 바이오 관련 산업생산 경기는 부문별 흐름이 다르게 나타나는 가운데, 수출은 바이오산업 관련 전 부문에서 증가세
 - **(생산지수)** 2023년 12월 국내 화장품 관련 생산지수는 80 수준을 유지하며 경기부진이 지속되는 가운데, 의약품 생산은 증감을 반복하며 개선되는 추세
 - 화장품 관련 전국 생산지수는 전월대비 1.0% 증가, 전년동월대비 0.3% 감소한 87.5로, '22년 하반기 이후 80 수준을 유지
 - 의약품 생산지수는 전월대비 8.8% 감소, 전년동월대비 1.0% 증가한 124.6으로, 완만한 개선세가 지속
 - **(품목별 수출액)** 2024년 1월 바이오산업은 품목과 관계없이 전년동월대비 수출이 증가했으며, 특히 화장품 부문의 실적이 크게 증가
 - 화장품 수출액은 전년동월대비 71.1%, 전월대비 14.7% 증가하며 연속 8개월째 수출 증가세가 지속되고 있으며, 기타 화장품 수출액 역시 전월 및 전년동월대비 각각 17.3%, 43.1% 증가
 - 의약품 수출액은 전월대비 8.4% 감소, 전년동월대비 6.5% 증가하며 '23년 11월부터 증가세 전환

- **(인천)** 인천시의 바이오산업 수출액은 '23년 8월 이후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데 반해, 생산경기는 전반적으로 긍정적이긴 하나 점차 감소하고 있어 주의가 필요
 - **(생산지수)** 2023년 12월 기준 화장품 관련 생산지수는 전년동월대비 3.8% 감소한 101.4, 의약품 생산지수는 전년동월대비 11.1% 감소한 118.8을 기록
 - **(품목별 수출액)** 2024년 1월 인천지역 화장품 및 의약품의 경우 전년동월대비 수출 증가세가 지속되고 있으나, 기타 화장품의 경우 큰 폭의 등락을 반복하며 보합세
 - 화장품 수출은 전월대비 32.0%, 전년동월대비 104.4% 크게 증가하며 전국과 유사한 추이를 보이고 있으며, 기타 화장품은 전월대비 54.7%, 전년동월대비 39.34% 감소하는 등 여전히 큰 폭의 증감률을 유지
 - 의약품 수출액은 '23년 8월 이후 증가세로 전환하여 2024년 1월 전월대비 25.2%, 전년동월대비 6.0% 증가한 약 398.4백억 달러를 기록

[표 2] 국내 바이오 관련 산업생산지수 및 증감

지역	항목	'23.09	'23.10	'23.11 (p)	'23.12 (p)	'22.12	전월비 (%)	전년 동월비 (%)
전국	화학물질 등 제조업	87.1	84.7	86.6	87.5	87.8	1.0	-0.3
	기타 화학제품 제조업	74.6	77.3	80.2	73.0	75.9	-9.0	-3.8
	의약품 제조업	128.2	123.7	136.6	124.6	123.4	-8.8	1.0
인천	화학물질 등 제조업	102.1	107.2	123.8	101.4	105.4	-18.1	-3.8
	의약품 제조업	159.8	151.6	165.1	118.8	133.7	-28.0	-1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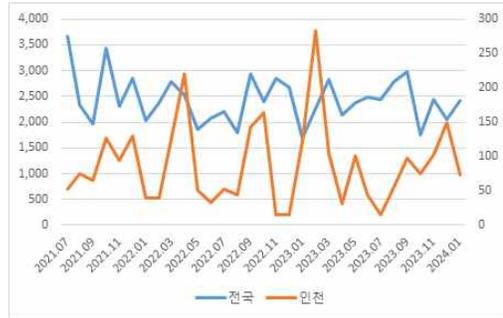
* 자료 : 통계청 '광업제조업동향조사 - 시도/산업별 광공업생산지수(2020=100)' 참고 및 재구성

* 주1 : 산업생산지수 파악에 활용한 항목은 한국표준산업분류를 기반으로 구분하였으며, '화학 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의약품 제외(C20)' 및 '기타 화학제품 제조업(C204)',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C21)'의 자료를 이용함. 인천지역 자료는 '기타 화학제품 제조업'에 해당하는 자료를 확인할 수 없어 상위 항목을 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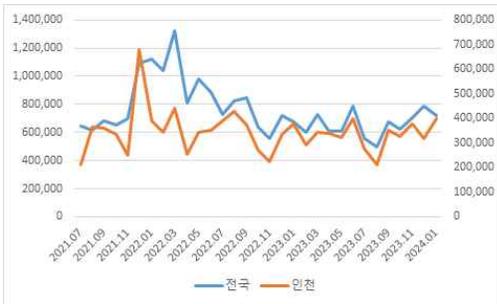
2 : 생산지수는 2020년을 기준으로 하는 원지수를 이용하였으며, 최근 2개월 수치는 잠정치로 추후 변동 가능



[화장품(MT12273)]



[기타 화장품(MT12279)]



[의약품(MT12262)]

* 자료 : K-stat 무역통계 '국내 품목 수출입 통계' 자료 참고 및 재구성

* 주 : 수출 금액은 1,000\$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그래프 좌측은 전국 기준, 우측을 인천 기준으로 작성

[그림 1] 바이오 품목별 수출 동향(2024.01)

[부록] 주요 산업 수출입지표(2024.01 잠정)

(단위 : 십만\$, %)

	전국					인천				
	수입		수출		수지	수입		수출		수지
	금액	증감	금액	증감		금액	증감	금액	증감	
반도체	101,428	-4.0	150,937	24.9	49,509	15,446	58.0	18,234	23.8	2,788
자동차	13,021	-31.9	81,337	22.9	68,316	1,370	-0.2	6,571	23.2	5,201
기계장비	54,692	3.6	60,453	26.4	5,762	4,768	14.5	4,980	7.9	212
바이오-의약	8,053	-12.9	5,580	8.0	-2,473	866	-2.4	3,958	5.6	3,093
바이오-화장품	1,630	5.3	7,810	68.6	6,180	30	67.0	1,940	104.1	1,911

* 자료 : K-stat 무역통계 '품목별, 지역별 수출입 통계' 참고 및 재구성

* 주1 : 각 산업의 통계 원자료 참고 시 품목명은 순서대로 △전자기기와 그 부분품, 녹음기·음성재생기·텔레비전의 영상과 음성의 기록기·재생기와 이들의 부분품·부속품(HS85) △철도용이나 궤도용 외의 차량과 그 부분품, 부속품(HS87) △원자로·보일러·기계류와 이들의 부분품(HS84) △의료용품(HS30) △정유와 레지노이드, 조제향료와 화장품, 화장용품(HS33) 등

2 : 각 지표의 증감은 전년동월대비 비율로 표기


 보건

복지부,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24~'28)' 발표


#보건복지부

-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의 건전한 운영을 위한 방안을 담은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24~'28)'을 발표하며, 건강보험제도 개편과 효율적 운영을 위한 정부의 중·장기 건강보험 정책 방향을 제시
 - 복지부는 금번 계획을 통해 현행 건강보험제도가 가진 필수의료 기피, 불필요한 의료이용 증가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건강보험 지불제도 개혁 △의료서비스 지원체계 개선 △건강보험재정 효율적 관리 △의료 혁신 지원 4대 정책 방향을 수립·추진
 - (제도 개혁) 의료행위의 다양한 방안을 고려하여 적절한 수가를 책정할 수 있도록 공공정책수가 도입 및 대안적 지불제도 도입을 추진하고, 지불제도 개혁 지원을 위한 혁신계정을 도입하여 성과중심 심사·평가 수행
 - (체계 개선) 거점기관 중심의 지역 의료기관 연계·협력을 강화하여 필요한 의료행위를 적시에 제공하는 전달체계를 구축하고, 의료이용이 적은 가입자에게 연간 12만 원 한도의 바우처를 제공하는 한편 본인부담상한제 및 재난적 의료비 지원을 확대
 - (효율 혁신) 비급여 진료 정보 공개, 기존 급여 항목 재평가·개편 등을 통해 건강보험 재정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국산 의약품 원료 사용 유도 및 혁신 의료기술 도입 기간 단축 지원 등 의료 혁신을 지원


 교육

아이 돌봄 부담 덜어줄 '늘봄학교' 2026년까지 모든 학교로 확대 시행


#교육부

- 정부는 초등생 자녀가 있는 가정의 돌봄 및 사교육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올해 안에 전국 초등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늘봄학교를 도입하고, 2026년까지 모든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확대*할 계획
 - * ('24년) 희망 초1학년 100%, ('25년) 희망 초1~2학년 100%, ('26년) 희망 초1~6학년 100%
 - 늘봄학교는 정규수업 외 학교를 중심으로 하는 체육, 문화·예술, 창의·과학 등 다양한 분야의 종합 교육프로그램으로, 앞으로는 장애학생, 이주배경학생 등 배경에 관계없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도록 정책 대상별 맞춤형 지원을 강화할 계획
 - 금번 추진계획에 따라 기존의 방과후 및 돌봄학교는 늘봄학교로 통합·개선하여 정규수업 전부터 최장 오후 8시까지 운영되며, 학교 내·외부의 교실, 센터, 도서관, 대학 등 다양한 장소에서 교육이 이루어질 예정
 - 또한 안전하고 체계적인 늘봄학교 운영을 위해 2025년부터는 각 초등학교에 전담조직인 '늘봄지원실'을 설치하고 인력을 배치하여, 교사의 늘봄학교 관련 업무가 더해지는 것을 방지

#여성가족부

- 여성가족부는 기존에 폭력 피해자 보호 강화를 위해 시·군·구 등 기초지자체 단위에 설치된 가정폭력 상담소를 확대·개편하여 가정폭력 외의 폭력 피해까지 지원하는 '통합상담소'로 운영할 계획
 - 금번에 확대·개편되는 통합상담소 26곳은 시·군·구 중 기존의 성폭력상담소 또는 통합상담소가 없는 지역을 중심으로 선정됐으며, 가정폭력 피해자 중심이었던 기존의 상담소와 다르게 성폭력·스토킹·교제폭력 피해자까지 확대하여 지원할 예정
 - 여가부는 신규 통합상담소에 기존인력 외의 성폭력 및 교제폭력 등의 상담 자격을 갖춘 전담 종사자 2~3명을 추가 배치하고, 내실있는 서비스 지원을 위한 종사자 교육 및 기관 역량 강화 컨설팅을 실시할 계획
 - 한편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퇴소자의 자립지원금 범위 확대 △주거지원시설 입주기간 연장(최대 6년) △교제폭력 피해자 의료비 지원 근거 마련 △가정폭력·스토킹 피해자 의료비·법률구조지원 한도 인상 등 폭력 피해자의 회복과 자립을 위한 지원도 확대
 - 또한 현재 운영 중인 스톱킹 피해자 긴급주거지원 사업운영기관을 대구·광주·울산·경기 지역에 1곳씩 추가하고, 하반기에는 전국 17개 시·도로 추가 확대할 계획

#교육부

- 교육부가 △대학 내 벽 허물기 촉진 △국내외 대학간 및 산학연 협력 강화 △학생 권익보호 △재직자·지역주민 교육기회 확대 등을 목표로 추진한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이 국무회의를 통과
 - 금번 개정에 따라 대학은 학과·학부 및 이에 상응하는 조직을 학칙으로 자유롭게 구성할 수 있게 되어 융합학과(전공) 신설 및 학생통합선발 등을 다양한 방식으로 유연한 학사조직 구성·운영할 수 있을 예정
 - 또한 전과 허용 학년 제한을 폐지하여 학생의 전공선택권을 확대하고, 전임교원 교수시간 및 의과대학 등의 수업연한을 대학에서 선택적·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개편
 - 국내외 대학 간 협약에 따른 공동교육과정의 자유로운 운영이 가능해졌으며, 학교 밖 수업 사선승인제도 폐지 및 협동수업제도 신설을 통해 산학연의 협력을 강화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
 - 학생이 예비군으로 인해 수업에 불참한 경우 수업 관련 자료를 제공하거나 보충수업을 통해 학습권을 보장하고, 인가 처리기간 단축 및 서류 제출 등 대학의 행정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도 개정안에 포함
 - 한편 △석·박사과정의 산업체 위탁교육 △시간제 등록인원 △전문대학 평생직업교육 △전문대학위험회과정에의 재직자 참여 등 사항에 대한 제도 완화를 통해 재직자 및 지역주민의 고등교육 참여기회를 확대할 계획

#문화체육관광부

-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가 2월 20일부터 3월 31일까지 ‘여행가는 달*’ 캠페인을 추진하여, 교통·숙박·여행상품 등에 대한 할인 혜택을 제공
 - * 기존에는 연중 1회(6월) 진행되었으나, 내수 활성화 효과를 고려해 올해부터 2회(3월, 6월)로 확대 운영
 - 문체부는 금번 ‘여행가는 달’의 슬로건이 ‘3월 숨은 여행 찾기, 로컬 재발견’인 만큼 이번 행사는 비수도권 지역여행 위주로 다양한 할인 혜택을 제공할 계획
 - ‘여행가는 달’의 상세 할인 혜택과 일정, 참여 방법 등에 대해서는 ‘여행가는 달’ 공식누리집 또는 포털사이트 ‘여행가는 달’ 검색을 통해 확인 가능

부문	주요 내용
철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코레일 협력 여행사 또는 주요 온라인 여행사를 통해 숙박 및 관광지 입장·체험권 등과 결합 구매 시 KTX 요금 최대 주중 50%, 주말·공휴일 30% 할인(8만 6천 명 규모) • 서해금빛열차, 남도해양열차, 동해산타열차, 백두대간협곡열차, 정선아리랑열차 등 5개 노선 운임 최대 50% 할인(8만 1천 명 규모)
항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방공항 도착 노선(울산, 여수, 사천, 포항경주) 이용 시 15,000원 할인(8천 명 규모)
렌터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렌터카 이용 시 수도권 10%, 비수도권 20%, 인구감소지역 50% 할인 제공(쿠폰 다운로드 필요)
숙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월 27일~3월 31까지 비수도권 지역의 5만 원 초과 숙박 예약에 사용가능한 3만 원 할인권 11만 장 배포
여행 상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알뜰 국내여행) ‘여행상품 기획전’을 통해 50여 개 국내 여행사의 90여 개 여행상품을 40% 할인 제공 • (3월엔 여기로) 자부담금 3만 원으로 전국 21개 소도시의 명소/전통문화/특산물/전통시장 등을 교통, 관광, 식사를 포함한 23개 코스로 체험하는 당일 기차여행(1,700여 명 규모, 전용열차 예매 필요)

#문화체육관광부

- 문화체육관광부와 산하 박물관·도서관·한국예술종합학교·국악원 등 전국 18개 지역 31개 기관에서 근무할 청년인턴 176명을 상·하반기에 나눠 모집할 계획
 - 상반기 채용은 2월 22일(목)부터 26일(월)까지 원서 접수를 통해 문체부 본부와 각 소속기관 등 29개 기관에서 일할 청년인턴 146명을 모집하며, 채용에는 19세~34세의 청년이라면 누구나 지원 가능
 - 최종합격자는 서류전형과 면접전형을 거쳐 3월 20일경 발표할 예정이며, 채용된 청년인턴은 오는 4월부터 9월까지 배정 기관에 근무할 예정
 - 각 인턴은 채용기관의 특성에 따라 △전시·조사 연구 및 문화재 보존처리 등 학예업무 △도서관 자료 수집, 아카이빙 등 사서 업무 △무대 장치·조명·의상 등 공연 업무 등 전문 분야의 실무를 경험 가능
 - 문체부 통합 채용 공고는 문체부 누리집 및 인사혁신처 나라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하반기 채용을 7월 중 공고할 계획

금융

▶ 첨단산업과 중소·중견기업 지원을 위한 '맞춤형 기업금융 지원방안' 발표 +

#금융위원회

- 지난 15일 금융위원회가 첨단산업 및 중소·중견기업이 직면한 금융난을 해결하고, 주력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한 약 76조 원 규모의 '맞춤형 기업금융 지원방안'을 발표
 - 금번 방안은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5대 시중은행과 IBK기업은행(기은), KDB산업은행(산은), 한국수출입은행(수은), 신용보증기금(신보), 기술보증기금(기보),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등 정책금융기관이 협력
 - 지원방안의 주요 내용은 하단과 같으며, 지원 방법 및 일정 등 상세한 내용은 금융위 발표 자료 참고

부문	신산업·혁신성장 첨단산업분야	밸류체인 강화 및 산업구조 개선	경영애로 해소 및 재기 지원	지원규모
첨단산업	- 공급망 안정기금 운영(수은, 5조 원) - 초격차 주력산업 지원(산은, 15조 원) - 정책금융기관이 PF방식 자금지원 검토)			20조 원
중견기업	- 전용 저리대출 (5대 은행+산은, 6조 원)	- 전용 펀드 (5대 은행, 5조 원) - P-CBO(산은·신보, 2조 원) - 성장사다리 보증지원 (5대 은행 신7보, 2.3조 원)	- 고금리 고비용 애로해소 (정책금융 12.3조 원)	15.3조 원
중소기업	- 신산업 진출 및 설비투자 확대 등 자금지원 (5대 은행 5조 원+정책금융 16.3조 원)		- 매출감소 중소기업 금리인하 프로그램 (5대 은행 기은, 5조 원) - 신속정상화 및 재기지원 (5대 은행 기은·신보·캠코, 2조 원)	40.6조 원
지원규모	26조 원	30.6조 원	19.3조 원	75.9조 원+@

산업

▶ 정부, 인공지능 시대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AI 가이드라인 마련 추진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024년 주요 정책인 '신뢰할 수 있는 AI 성장 여건 조성'을 위해 AI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 마련을 추진하고, AI 학습을 위한 데이터 활용을 지원하는 한편 개인정보 주체의 권리를 강화할 계획
 - 우선 올해 12월까지 △공개정보 △비정형데이터 △생체인식정보 △합성데이터 △이동형 영상기기 △투명성 확보 등 AI의 각 단계별 「개인정보 보호법」 적용 원칙 및 기준을 구체화한 '6대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계획
 - 가이드라인 마련과 함께 기업이 AI 모델·서비스 개발 과정에서 개인정보 법령 준수방안을 마련하고 행정처분을 면제받는 '사전적정성 검토제'를 3월부터 본격 운영할 예정
 - 또한 안전조치를 전제로 원본 영상정보를 활용가능케 하는 규제샌드박스로 첨단산업 성장을 지원하고, 통계청 등에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개인정보처리가 가능하도록 지원하는 '개인정보 안심구역'을 운영할 예정
 - 한편, 3월부터 AI 기반 △자동화 결정 여부 사전공개 △설명 요구권 △거부권 등을 통해 정보주체의 대응권을 보장하고, 9월까지 AI 개인정보 리스크평가 모델을 마련하여 AI 활용에 대한 국민 불안을 경감할 계획

참고 자료

-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 「제28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8) 주요 성과 및 시사점」, TRADE BRIEF, 2023.12.20.
-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 「2024년 주요 EU 통상규제 핵심내용」, EU통상정보, 2024.01.18.
- 한국무역협회 통상지원센터, 「미리 보는 EU 탄소국경조정제도 시범 시행 기간 주요 내용 및 시사점」, KITA 통상리포트, 2023.09.26.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EU ‘그린딜 산업계획’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 2023.02.17.
- 국회미래연구원, 「탄소국경조정 메커니즘 도입 확정, 기후통상 시대의 대응 전략」, 2023.06.19.
- 산업연구원, 「탄소중립 산업통상 정책 비교분석 - 미국 인플레이션감축법, EU 탄소중립산업법과 핵심원자재법을 중심으로」, 2023.09.
- 국회예산정책처, 「EU와 미국의 ‘탄소무역장벽’ 주요 내용과 영향」, 2023.05.24.
-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 「EU 디지털 제품 여권(Digital Product Passport) 추진 현황 및 시사점」, 2024.01.05.
- KOTRA, “EU, 제품 생애주기의 지속가능성 제고 위한 규정 마련 중”, 2023.09.25.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주요국의 탄소중립과 그린성장전략에 관한 연구 : EU, 미국, 중국, 일본을 중심으로」, 2022.07.
- 대신증권, 「미국의 ESG 법안 동향 - 기후 공시 의무화와 탄소 관세」, 2023.10.10.
- 국회예산정책처,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의 주요 내용과 영향」, 2022.10.27.
- NISKANEN CENTER, “What’s in the carbon border adjustment bill introduced by Senator Whitehouse”, 2022.06.08.
- NISKANEN CENTER, “Senator Whitehouse reintroduced the Clean Competition Act : A narrow-based border-adjusted carbon tax”, 2023.12.07.
- 에너지경제연구원, 「영국의 2050 탄소중립 전략 수립 동향」, ENERGY FOCUS, 2021.12.
- 산업연구원, 「저탄소·녹색 발전 정책의 시사점」, 중국산업경제 브리프, 2022.02.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22년 양회를 통해 본 중국의 경제정책 방향과 시사점」, 2022.03.31.
- 중국정부, “关于印发《完善能源消费强度和总量双控制度方案》的通知”, 2021.09.11
- 중국정부, “国务院关于印发2030年前碳达峰行动方案的通知”, 2021.10.26.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주요국의 녹색산업 활성화 정책 동향과 시사점」, 2023.12.06.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일본의 중장기 통상전략과 한·일 협력 방안」, 2022.12.
- 국회도서관, 「일본 정부의 녹색전환(Green Transformation) 추진 현황」, 2023.03.23.
- 일본 경제산업성, “2050年カーボンニュートラルに伴うグリーン成長戦略を策定しました -「経済と環境の好循環」につなげるための産業政策-”, 2020.12.25.
- 일본 경제산업성 천연자원 및 에너지부, “「GX実現」に向けた日本のエネルギー政策 (前編) 安定供給を前提に脱

炭素を進める”, 2023.03.22.

- 인천광역시 홈페이지(www.incheon.go.kr),
- 산업통상자원부, “월별 수출입 동향(매월호)”.
- 국가통계포털(KOSIS), ‘공업제조업 동향조사’.
- K-stat 무역통계, ‘국내 품목별 수출입 통계’ 및 ‘국내 지역별 수출입 통계’.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의료 이용 적으면 건보료 일부 환급…암 등의 약제비 부담도 지속 완화”, 보건복지부, 2024.02.05.
- 보건복지부, “건강보험 혁신으로, 필수의료 보장하고, 의료 개혁을 안정적으로 뒷받침하겠습니다.”, 2024.02.04.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아이 돌봄 걱정 덜어줄 ‘늘봄’학교, 2학기에 전국 초등학교로 확대”, 교육부, 2024.02.05.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가정폭력 상담소 26곳, 성폭력·스토킹·교제폭력 피해도 지원”, 여성가족부, 2024.02.05.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학과·학부 설치, 대학 자율에 맡긴다…신입생도 전과 가능”, 교육부, 2024.02.13.
- 교육부, “교육부 소관 3개 안전 국무회의 통과”, 2024.02.1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3월은 여행가는 달…KTX·숙박 반값 여행 떠나세요”, 문화체육관광부, 2024.02.14.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문화정책 일 경험 쌓으세요…문체부, 청년인턴 176명 채용”, 문화체육관광부, 2024.02.15.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기업 맞춤형 금융 76조 투입…첨단산업 키우고 중소·중견기업 지원”, 금융위원회, 2024.02.15.
- 금융위원회, “맞춤형 기업금융 지원방안 관련 은행장 간담회 개최”, 2024.02.15.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개인정보 보호하는 시시대 연다…단계별 6대 가이드라인 마련’, 개인정보보호위원회, 2024.02.16.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국민 삶이 풍요롭고 개인정보가 안전한 인공지능 시대를 연다”, 2024.02.16.

인천 경제산업 ISSUE&TREND

제24-4호(2024.02.23)

발행처 인천연구원
발행일 2024년 02월 23일
주소 (22711) 인천광역시 서구 심곡로 98
전화 032-260-2600
홈페이지 www.ii.re.kr

본 리포트의 내용은 연구진의 의견으로 연구원의 공식입장이 아닙니다.
본 리포트의 저작권은 인천연구원에 귀속되며, 원고의 무단전재, 복제, 배포 등
저작권 전반에 관한 침해 행위를 금합니다.